위기상황의 취약계층을 돕는 안전망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산재단의 SOS 복지지원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아산재단은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1977년 설립 직후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소득 상실, 퇴거 위기, 질병과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SOS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875건의 위기상황을 지원했다.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SOS 복지지원사업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OS 복지지원사업은 정부의 사회복지제도가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절박한 이들을 돕는 민간차원의 안전망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아무리 촘촘히 설계되었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그런 점에서 SOS 복지지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죠."

정부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SOS 복지지원사업

재단이 SOS 복지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탈북모자 아사 사건' 등 가족 단위의 비극적 사건이 이어지면서 민간차원에서라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집행하는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예산만 연간 1조 원 이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들 대상의 긴급지원을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한 해에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민간재단에서 어떻게 사업을 차별화하겠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SOS 복지지원사업을 시작하자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최재성 교수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정말 '요즘도 이런 일이 있구나'하고 탄식이 나올 정도로 위급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정부 복지제도를 모두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최재성 교수는 암 투병과 빚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은 1인 가구 30대 청년의 상황을 대표사례로 꼽는다.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살아온 30대 청년이 신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사기를 당해서 부채에 시달리고 월세가 체납되어 원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LH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임차보증금을 구할 데가 없었다. 정부 긴급복지제도의 도움도 부족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재단의 SOS 복지지원사업의 도움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위기가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처럼 도움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본이 절대적으로 없으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부의 복지지원사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이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지 혁신 모델 발굴로 사회적 메시지 전해야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지원사업과 대상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큰 좌절감을 느낀다. 그래서 최재성 교수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와 재단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2022년 SOS 복지지원사업 워크숍 모습.

사회복지사에게 사업을 알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SOS 복지지원사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일선 주민센터 등 사회복지 현장에 직접 홍보하며 소통했다.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토록 하고, 상시 심사를 통해 소요기간도 크게 단축했다. 지원금액도 평균 3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로 설정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신속성과 충분성을 확보하고 신청기관의 입소문이 퍼지자 첫해 100건 정도에 머무르던 신청사례가 300건까지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도 정부 긴급복지지원으로는 부족한 경우 재단 SOS 복지지원사업을 찾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복지예산을 늘려도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위기가구는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민간은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복지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역할이죠." 최재성 교수는 '앞으로도 아산재단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 **편집부**